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한일 · 북일 관계 전망

드디어 미국대선이 끝나고 2021년부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
트럼프대통령이 보여준 북미대화의 드라마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고,
한국은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야 한다. 미중 간의 경쟁 구도, 한일 간의 역사 인식 문제, 북한과의 대화
등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번 일본공간 좌담회는 이러한 주제들을 심도있게 파헤쳐 봤다.



일 시 2020년 12월 14일(월) 오후 3시-5시

장 소 통일연구원 811호(5회의실)

주 최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사회자 최희식(국민대학교 교수)

참석자 우정엽(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윤대엽(대전대학교 교수)

이기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한일·북일 관계 전망”

// 최희식:



최희식 (국민대학교)

오늘 좌담회는 세 파트로 진행이 될 건데, 우선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동아시아 정책, 이것을 한 파트로 하구요. 두 번째는 스가 정부의 국내 정치와 대외 정치,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문제니깐 강제 동원 문제하고 최근에 이제 위안부 판결이 다음 달로 연기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두 개가 동시에 나와 버리니까 이것도 좀 고려하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또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중재 노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엮어서 그걸 이제 세 번째 파트로 하고 네 번째 파트는 역시 바이든과 스가의 대북 정책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북일, 남북일 관계, 한꺼번에 해서 다섯 쪽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이제 거의 확실히 되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그리고 동아시아 정책을 플러스 이게 이제 한국 외교나 혹은 한일 관계 뭐 이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정엽 선생님께서 이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중관계 및 아시아정책

// 우정엽:

바이든 정부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과연 바이든 정부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대하기 편해진 정부냐? 라고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부드럽게 하는 사람임에는 분명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결코 편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동맹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는데 그 동맹을 중시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한테는 동맹 간의 행동일치를

상당히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 문제를 우리에게 매우 강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민주당 쪽에 가까운 워싱턴의 전문가들, 전직 관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우리나라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말이죠. 그래서 한미일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추상적으로는 중국이라는 요인에 대한 위협인식을 한국이 공유하는 국가이냐 하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협인식이 공유되지 않다 보니까 한국이 이 부분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든 정부의 동맹 중시



우정엽 (세종연구소)

Post-Corona

정책이라는 것은 트럼프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에게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인수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특징적인 인물들을 보자면 이 사람들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보는 게 트럼프 때 국방 정책을 썼던 엘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은 부차관보를 지낸 인물인데, 이 사람과 앞으로 인수위에 들어가서 국방부의 차관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일라이 레트너가 글을 같이 많이 썼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군사 전략에 관한 부분ைய요. 그리고 일라이 레트너와 같은 경우 바이든 부통령 당시 안보 부보좌관을 했었는데 그때도 중국의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어떤 타협의 공간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방, 군사 분야에서는 결국 중국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이 보다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압박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의 동맹 중시 정책과 이런 인식이 결합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미국의 대중정책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희식:

윤대엽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윤대엽: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방향은 개념적으로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타협적 Anything but 트럼프, 대외적으로

는 완전하게 Anything but 트럼프 정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미국의 대외전략이 국내 정치의 결과물이라는 대표적인 경험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차기 대선을 위해서는 국내적인 지지기반을 어떻게 다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 고용, 산업, 무역과 같은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와 연속적인 변화가 진행되겠지만, 인권, 환경, 복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정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윤대엽 (대전대학교)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정책이었던 Great America Again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America is Back으로 변경되었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이익이나 가치냐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익 중심의 대외전략에 치중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전후 체제에서 미국이 해왔던 소위 리버럴 레비아탄으로서의 역할들, 보편적 가치라던가 다자적인 협력, 공공재를 제공하는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정엽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대외적인 전략 목표는 미중 관계가 될 텐데 우선 미중관계의 성격에 대해서 개념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신냉전이라는 말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미중 상호의존구조, 예를 들어 1987년에도 미소간의 연간 무역액이 2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미중 간에는 하루에 2억 달러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소 냉전과 같이 블록화 된 미중분리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논쟁도 있는데, 중국이 과연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려는 의도와 역량이 있는지는 아직 논쟁거리입니다.

Post-Corona

다. 중국의 패권 경쟁이 지역 차원 쟁점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중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패권 질서라는 것이 주변국의 운명은 이미 미중 갈등으로 결정되었다는 구조적인 시각이라는 점에서도 현실적으로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중 관계를 일종의 체제로 이해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체제화 된 미중경쟁을 제도화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제로서의 미중 경쟁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중 경쟁은 기본적으로 전후 체제에서 미국주도로 만들어진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무역갈등, 기술 표준, 동맹이라든가 다자 협력은 모두 전후 미국이 만들어놓은 질서 체제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후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대일로 국제포럼도 사실상의 다자질서가 될 것이고, AIIB나 인도-태평양 구상과 같은 제도들이 전후 체제를 대체하여 미중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새로운 운동장으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중 간의 갈등이 쟁점화된 시기였다면, 바이든 정부는 체제로서 미중 경쟁관계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우정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가 결코 한국 정부에 쉽지 않은 정부가 될 것 라는 점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희식:

네. 체제로서의 미중관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그렇다면 이기태 선생님께서도 한 번 이야기 해주신다면?

// 이기태:

네. 두 분께서도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도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중관계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코로나 19에 관한 중국책임론과 같이 일방적인 중국 때리기의 양상이 좀 더 강했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패권 경쟁, 인권 문제 등 새로운 미중 간 쟁점 혹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행정부에서 강조해왔던 쟁점을 가지고 미중 간 경쟁체제가 심화



이기태 (통일연구원)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윤대엽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제질서 차원에서 미국이 현상변경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중국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맞서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과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어떤 정부든지 이전 정부에서 사용했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재균형(rebalancing)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모두 중국의 부상에 미국이 대응한다는 점에서는 계속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용어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의 기조 즉 아시아에 대한 관여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일본 입장은 무엇인가입니다. 사실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아베 정부가 먼저 주창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동조했던 것이고, 이후 일본보다는 미국이 좀 더 세밀하게 구상 전략을 다듬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도 약간의 변화 조짐이 보입니다. 스가 총리가 동남아시아 순방 중에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물론 일본 외무성은 용어의 변화를 부정하

Post-Corona

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스가 정부 모두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 변경 및 내용에서도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 위협과 함께 대북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지도자 간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과연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합의했던 북미 간 합의사항을 과연 계승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간 합의사항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통일연구원에서 여러 차례 미국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미국 워싱턴에서도 약간의 변화 기류가 느껴집니다. 흔히 말하는 강경파라고 불렸던 전문가들이 이제 조금은 입장을 바꾸면서 북미 간 합의라는 전제 하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희식: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나오더라도 미중 경쟁은 심화될 것이고 그게 한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가 노멀로 돌아오겠다는 그 말 자체가 동맹을 일정 정도는 관리하겠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트럼프 행정부와와의 정책적 차이

// 우정엽:

일단 동맹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일단 트럼프 때 문제 됐던 현안들, 방위비 같은 문제를 정권 차원의 문제까지 올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인상으로 합의를 하되 일단 방위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문제는 이미 이야기가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도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단기적으로 볼 때 두 국가 간의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액 수준을 어느 정도 올리는데 합의하겠지만, 거기에는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문제를 논의하자, 정도로 넣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과 관련한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한국의 지정학적인 문제를 고려할 수는 있겠죠. 고려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볼 때 한국은 이 정도 동맹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일본과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미국이 생각하는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국가들이고 보다 더 전략적으로 신뢰가 가는 그런 동맹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이 이상하기 어려우니 한국은 이 정도의 동맹이라는 차원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은 있죠. 그게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 편하다고 인식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게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지는 그건 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윤대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관계를 체제화 된 미중 경쟁의 제도적인 기반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비대칭 동맹관계

Post-Corona

를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인 이견은 구조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탈냉전 이후 동맹의 가치와 동맹의 목적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은 분명히 냉전체제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왔지만, 탈냉전기 더군다나 미중 경쟁체제에 있어서 목적과 가치의 균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양자동맹을 중국에 대한 군사적인 또 잠재적인 위협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활용하려고 할 것이고, 일본은 100%, 선제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동맹체제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냉전시기 북한에 국한되었던 한미동맹을 미국이 원하는 동맹가치의 확장과 전환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균열관계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인 입장과는 균열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2017년에 뉴욕 타임즈, YouGov에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의 동맹국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본은 21위, 한국은 27위인데 민주당 지지자에게는 일본의 동맹가치 17위, 공화당 지지자에게는 20위입니다. 한국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에게는 동맹가치가 43위인 반면, 공화당에게는 26위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군사적 동맹에 더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에 더 중점을 둔다면, 한국은 그런 동맹의 정체성, 동맹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장하는데 민주당 정부와 긴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최희식:

그러면 쿼드¹⁾ 플러스나 혹은 아시아에서의 어떤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같

1) Quad를 말한다.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로 2020년 8월 31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쿼드'를 공식적인 국제기구로 만들 뜻을 밝혔다.

은 것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여전히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이기태:

냉전구도에서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성립이 되었는데, 탈냉전 이후 특히 최근에는 한미일 관계를 둘러싼 체제 변화 혹은 정책 변화가 생겼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같은 탈냉전 구도를 지향하는 정책에서 바라본다면 한미일 동맹은 여전히 냉전적 구도에서 움직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대등한 미일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이라는 외부 변수가 작용하는 가운데 일본과 같은 입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일본의 전통적 외교, 예를 들면 전방위 외교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특히 대중 정책과 관련해서 일본이 중국을 봉쇄하거나 견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와 함께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한다는 점이 일본 외교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 쿼드 플러스에 참가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쿼드 플러스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최소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너무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일대일로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 중 어느 쪽에도 참여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일대일로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실리적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과연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한국에 배치

Post-Corona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전략에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 과거에는 미국이 한반도 지역에 핵무기 배치를 통해 핵억제 전략을 전개했다면 지금은 교통이나 기술 발전 속에 굳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원거리 타격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굳이 한국이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없고, 현재 미국도 한국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오히려 일본이 한국보다 이 문제를 더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 최희식:

우정엽 선생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우정엽:

미사일 관련해서는 이 중거리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이동식을 추구하는 건데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대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은 주한 미군, 그러니까 연합군이라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을 한국이 개발해서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 호환 운영이라는 측면만 보면 굳이 미군 미사일을 갖다 놓을 필요는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직접 갖다 놓겠다는 압력은 제가 볼 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사람들도 일본은 그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미군 미사일을 미국 트럭에 실어서 일본 도로를 다녀야 되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기에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하고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미사일을 실제로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기여(contribute)를 해야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덜 심각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사드 문제 때문에 미사일 배치라는 게 좀 더 트라우마타이즈(traumatize) 되고 있는 그러한 인식이긴 한데, 오히려 미국은 지금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쿼드나 이런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박사님이 잘 말씀해주셨는데, 일본은 미국과 SM3도 같이 개발하고 이지스어쇼어도 갖다 놓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레이더들도 이미 갖다 놓은 상황이지만 중국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우린 그게 왜 안 될까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박사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항상 이 문제를 너무 선택의 프레임으로 수동적으로 보니까 그러한 입장에 놓이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계속 공격을 하고 싶은 목표물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기정사실화하면 우리가 아무리 무얼 해도 미일관계처럼 동맹관계가 워낙 탄탄하니까 그냥 상수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들에서도 이 문제를 늘 선택의 문제처럼 다루다보니,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어버린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쿼드 같은 것도 글썽요. 아직 쿼드라는 것 자체는 미국에서도 아직은 제도화나 구체적인 정책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념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쿼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체적으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이 쿼드, 쿼드 플러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매우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서,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기 보다는 어떠한 가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필요로 한다는 식의 접근이 설득력이 있게 되겠죠. 오바마 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남중국해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스

Post- Corona

텐스를 취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듯이 그런 식의 입장을 정리하는 게 오히려 일본과 미국,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윤대엽:

좀더 넓은 의미에서 2019년 8월 INF조약 파기를 계기로 동북아에 미중 간의 전략적인 미사일 경쟁이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소련이 서유럽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이 스텔링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유럽에는 엄청난 전략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미소간의 중거리미사일 경쟁이 결국 SDI라고 하는 우주전략 경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INF조약에 빠져있던 중국은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확충하면서 미중 간에 전략적인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INF 조약 파기를 통해 중국과의 대칭적인 미사일 전력을 운용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공격무기와 방어체계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에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에 높지 않습니다. 이미 괌 정도에만 배치를 해도 미사일에 있어서는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중 간의 핵 경쟁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핵을 가지지 않은 한국과 일본에는 전략적 위기가 가중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겠지만 다자적인 동맹 협력이라는 맥락에서 협력대상국을 확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사실

상 전략적 명확성을 가지고 불참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협력을 체제로서의 미중경쟁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미중경쟁체제는 양자택일의 냉전적인 모순이라기보다 체제가 제도화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 전략이 목표하는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항해의 자유라던지, 국제법에 근거한 영토 분쟁의 해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분명히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에 구속되어서 한중 관계에 구속되어서 아무런 입장 표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략적인 열세, 위상과 역할의 축소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최희식: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에 좀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관계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갈등들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강제 동원문제나 한일 간의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는 무역 규제 문제나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일 협력을 추동해내려고 한다는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이다, 간접적인 압력 정도에 머무를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먼저 이기태 박사님부터 이야기해주시죠.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일 관계

// 이기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역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강화로 나아갈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자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으로 나아갈 것이냐는 점을 봤을 때 방향성은 그렇겠지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맹관계를 주로 '역사'와 '안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안보 측면에서 미일 간 안보협력은 계속 강화되어 왔고, 한미 간 안보협력도 기존보다 협력적 관계가 강화될 것입니다. 역사 문제는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한미일 간의 정책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대북정책에서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일본 정부가 동의하는지도 의문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미일 협력에서 하나의 한계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일 간 역사 문제의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때 한국과 일본이 흔히 얘기하는 '고자질 외교'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한일 서로 자신들의 역사 인식 및 입장을 바탕으로 미국에 가서 해결해달라는 식이었는데 미국의 기본 입장은 양국 간 역사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지요. 따라서 현재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위안부 문제가 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어느 정도 중재 혹은 권유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보다 적극적인 해결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일 간 국제질서 체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한일 양국이 한반도 냉전 구도를 탈피하는데 있어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얘기를 할 때 일본측에

서 우려하는 내용 중 하나가 유엔사 해체 문제입니다. 즉 종전선언, 평화협정 과정에서 유엔사 해체는 필연적이고 그러면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 안보 위협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유엔사 해체 문제도 한반도 냉전 질서 해체라는 측면에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사 문제는 한미일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참여하고 있는 형태이고, 정작 한국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전협정, 평화협정 과정에서도 유엔사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한국이나 중국 등 유엔 회원국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미일 플러스 알파’라는 형태의 다자 안보 협의체를 향한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보는 새로운 시각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윤대엽:

이기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역사 문제에 대해서 또 한일 간의 정치적인 쟁점에 대해서 미국이 명시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하거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에 있어서도 명시적인 갈등 요인이 잠재 되어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보다 오히려 명시적인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일본과 안보 협력을 원하는 이유는 두 가지,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 중국의 잠재적인 위협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동중국해 문제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의 분명한 전략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일 간에는 분명하고 명백한 안보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북미 간의 북핵 협상에서 일본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일본

Post-Corona

의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과 또 일본의 참여 역할이 없다고 인식하는 한국 간의 명시적인 안보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중국 문제에 대한 이견도 명백합니다. 한국이 수출의 26%, 일본이 수출의 2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토 분쟁의 대상국이기도 하고, 일미 동맹의 비대칭 관계 속에서 미국의 전략에 편승하고 있는 전략적인 이익이 있고, 더군다나 북핵 문제와 중국 문제가 상호연결된 위협의 문제라는 점에서 위협인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정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 간에는 공식화된 분쟁이 없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쟁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상수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중일 간에는 이게 변수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이 공론화되지 않는 중일관계는 일본의 역할인가, 그게 아닙니다. 주변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고 이 때문에 중국의 반일감정은 국내담론에 국한될 뿐, 그것을 외교적으로 공식화하지 않음으로써 중일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한일 간의 쟁점을 관리하지 못하는 한국과는 매우 다른 점입니다. 남북관계, 한중관계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략적 인내심을 가지고 갈등을 관리하지만 한일 관계에서는 유독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에도 전략적 불균형이 있습니다. 주변관계의 평화를 위한 균형이랄까요,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정엽:

일본 입장에서 지금 한국에게 그렇게 너그러워야 할 입장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관한 부분을 역사적 문제와 별개로 요구할 가능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에는 한일 간의 역사적인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을 압박했던 것이고, 그 결과물이 2015년 위안부 합의 같은 것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미국의 민주당 쪽 관료들은 위안부 합의를 깬 것은 전적으로 한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징용문제와 배상문제와 같은 것도 한국의 법률 체계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제 간, 국가 간의 합의를 존중해주는 부분이 적고, 국내적 상황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미국이 개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와는 별개로 징용공 배상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단지 한미일 안보협력을 해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한국에 대한 압력인 것이지, 일본에 대한 압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이든 정부 하에 한일 간의 문제는 오바마 때의 한일 간의 문제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 대한 압력 역시 오바마 때와는 다르겠죠. 오바마 때는 아베가 야스쿠니 가는 것도 뭐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 한일 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이런 것들이 전부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문제는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우리에게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희식:

미국이 한일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강한 압박이 들어오겠지만,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들어올 틈이 그렇게 많진 않고, 오히려 지금 역사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가득 차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일본의 태도가 중요해지는 거네요. 역사문제에 있어서나 일본의 대한 정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호적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국의 힘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스가 정권의 외교 전략, 혹은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가 정권의 총선거 문제도 있고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어서 장기 집권이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스가 정권의 외교전략,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태도, 정치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쪽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대엽 박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일본 국내 정치 예상

// 윤대엽:

스가 내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의제는 코로나 극복이라는 것과 내년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스가 내각 출범 이전에는 총선논의가 있었지만, 일단 내년 3, 4월 정도가 되어야 코로나 정국이 좀 안정화 될 것이고, 이어 바로 올림픽이 시작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마 스가 내

각은 내년 올림픽 이후까지는 일단 관리형 내각으로서 정치적인 쟁점보다는 현재 아베 내각이 물려준 두 가지 현안을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도 역시 관리 중심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돌파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진전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갈등은 역사문제의 사법화, 국내정치의 외부화로 인한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1965년 체제의 외교적 합의에 내재되어 있는 법적인 모순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한일 간의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는 결국 북일 간의 수교협상의 의제와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고 정치적인 해결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기태:

스가 정부의 정치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정권 출범 때부터 여러 예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리형 내각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 이후에 초기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 스가 정부가 장기 정권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논의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역시 변수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가 정권 지지율과 관련이 있고, 다음으로 도쿄 올림픽 개최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향후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고 코로나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중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는 역시 힘들다고 보고, 내년 9월까지 관리내각으로 갈 것입니다. 즉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서 도쿄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관리내각으로 끝날 것이고, 다행히도 도쿄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일본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스가 정부 역시 장기 정권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봅니

Post-Corona

다. 결국 코로나19, 도쿄 올림픽, 그리고 디지털청 설치 등 행정개혁 등 국내 개혁문제의 성과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과의 관계 역시 관리 형태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가 총리는 외교에 그렇게 능숙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베 정부에서 오랫동안 관방장관을 지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스가 총리는 관료들을 상대로는 능수능란한 인물이지만 외교 무대 경험은 작년 미국 방문과 취임 이후 동남아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 순방 정도입니다. 따라서 외교에 능숙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아베 정부 이상의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는 어렵습니다. 한일 관계에서는 우정엽 박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본은 느긋한 입장에서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입장을 누그러뜨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북일 관계는 아까 언급한대로 북일 국교정상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한 배상금 확보 및 일본의 대북 투자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의 일본 참여(자금, 기술제공) 등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긍정적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예상하는 가운데 스가 정부가 어떠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우정엽:

저는 작년 지소미아 문제가 있었을 때, 미국이 어떻게든 힘을 써서 한국이 번복하게 만든 그런 양상이 바이든 때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국이 문제를 제공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먼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고요. 현상 변경은 한국이 했다는 인식이 미국 쪽에 있기 때문에 오바마 때처럼 위안부 문제로 한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것은 이제 좀 어렵게 된 것이죠. 일본 국내 정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

겠지만 징용 배상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가진 그 외의 인물이건 간에 일본 정부로서는 물러서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해결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 풀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볼 때도 한국이 문제를 제공한 것이지 일본 정권이 우경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는 보지 않아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납북자 문제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볼 때 일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유해 선언과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유해를 가져올 당시 돈을 지불을 했거든요. 물론 그러한 형태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기태:

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북일 스톡홀름 합의 때 납북자 문제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인 유골 및 묘지 문제와 이에 대한 처리와 같은 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계속해서 납북자 문제만 얘기했거든요. 넓게 보면 북일 간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 스스로가 허들을 높여 놓고 납북자 문제를 국내정치문제화 시켰다고 봅니다. 납북자 문제 해결 없이 북한하고는 무언가 해결이 없다고 규정해 버렸는데 사실 북일 간에는 서로 접근해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부각이 안 되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 윤대엽:

지금 한일 갈등의 해결에서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압류된 일본 기업의

Post-Corona

자산의 현금화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현금화 하여 보상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안을 일본에 전달을 했고 스가 내각은 이에 전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청증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국내여론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한국 정부가 사후 보전을 해줄 것이라면 아예 현금화하지 않고 한국이 배상을 하고 차후에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희식:

앞에서 우정엽 선생님께서 역사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의 압력이 거꾸로 한국에게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정부 시대 때하고는 조금 다른 거 같아요. 박근혜 정부 시대에는 일본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나지 않겠다, 해결책을 내놓아라, 이렇게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미국의 압력이 한국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소미아와 위안부 합의가 사실은 포괄적으로 타결이 되는 그런 현상을 빚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일본이 거꾸로 우리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기 전에 만나지도 않겠다, 한중일 정상회담도 안오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강제동원 문제가 있고 지소미아 문제가 있고 무역규제 문제가 있는 건데 결국은 뭐 박근혜 정부 시기와 비슷하게 포괄적으로 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방금 윤대엽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압력이 일본에게 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은 문희상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제안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들을 계속 거절하는 국가가 지금 일본이잖아요. 결국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어느 지점에서는 정책 타결을 해야되는 거기 때

문에 그래야지 지소미야 문제와 무역규정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게 바로 미국이 원하는 한일 안보협력과 역사 문제를 동시에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미국의 압력이 일본에게 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에도 압력이 크겠죠. 한국에도 좀 더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제안을 하라는 식으로 압력이 오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어느 정도에서는 정책 타결을 하겠다 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그게 국내적 반발이 일정 정도 있을 지라도 하겠다라는 의지들을 지금까지 보여 왔고, 그런 여러 해결책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그걸 수용하도록 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 미국의 압력이 더 세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지소미야 문제와 무역 규제 문제까지 한꺼번에 타결을 함으로써 한일갈등을 종지부를 찍고, 물론 예전처럼 한미일 협력체제는 불가하겠지만, 어느 정도 유연한 협력들을 추구하는 토대를 만들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 윤대엽:

청중 비용보다 역사적인 합의 더군다나 제3자인 미국의 강압에 의한 한일 역사 문제의 봉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청중 비용이 일본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한국이 타협하지 못하는 이유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보편적인 대중인식인 여론 차원에서 역사 문제가 제기되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참 비관적 역사문제 합의가……. 일단 현금화에 대해서 그걸 나중에 한국이 보상하고 나중에 보상권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도 제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결국 그게 핵심 문제인데…….

// 최희식:

결국은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지요. 지금 한국 정부는 일본이 먼저 해주어 체면을 세워주면 우리도 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동시에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거 같아요. 미국이 조금 더 압력을 넣어준다면 한국은 그걸 수용할 수 있거든요. 이미 우리가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미리 해준다면 얼마든지 다 보존해주겠다고 말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걸 보존할거라는 건 이미 약속되어 있는거나 마찬가지인거죠. 문제는 이제 누가 먼저 할 거냐, 이걸 두고 지금 한국과 일본이 접점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압력이 중재가 들어온다면, 일본에게 좀 더 압력이 흐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주제가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한일 북일 관계 전망이기 때문에 북일 관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정엽 선생님과 이기태 선생님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납치 피해자 문제가 전부가 아닌데, 사실 여러 가지 다른 면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스가 내각의 그런 정치적 결단력이 있겠느냐 그럴만한 정치적 기반도 있는거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어떠한 대북 정책을 취하느냐, 이것과 일본의 대북 정책이 조응을 할 수 있겠는지 여부도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대북 정책을 좀 이야기 해보면서 그 사이에 어떤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지 한 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뭐 이기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번 좀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스가 내각의 대북정책

// 이기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이 합의했던 북미 간 합의사항을 과연 얼마나 계승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전형적인 상황대응 외교를 보이는데 2017년까지 압박과 대화 중에서 압박이 우선이었다면 2018년 들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조건 없는 만남이라는 대화 자세로 바뀌나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의 정책에 따라 일본의 대북정책의 기본 자세도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합의사항을 계승하고, 스가 정부의 조건 없는 만남 기조가 유지됐을 때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계기는 역시 도쿄 올림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쿄 올림픽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도쿄 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하는 당면 과제고 인식하고 중국은 그 다음해에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다면 베이징 올림픽 역시 개최가 힘들다고 봅니다. 따라서 올림픽을 계기로 중일 간에는 협력적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한국 정부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시켰다는 점에서 도쿄 올림픽을 통해 일본과 화해를 모색하고, 북일 간 대화 가능성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까지 도쿄 올림픽에 초청할 수 있다면 양자뿐만 아니라 다자 간 협상을 위한 정상회담 개최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윤대엽:

미일 간의 안보 협력은 이견 없이 강화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협력이 강화될 것이고, 특히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협력 진전될 것입니다.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라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간에 있어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자적인 협력의 기반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의 동아시아에 군사적인 관여는 훨씬 더 확대될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 추진하는 대북, 북핵, 북핵 문제 해결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편승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이라는 안보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납치자 문제인데, 이 납치자 문제에 있어서 만큼 한일 간의 이견이 큰 것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2년의 평양 회담을 통해서 오히려 납치자 문제가 북한에 의한 문제를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납치자 문제를 순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안보전략 문화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납치자 문제는 핵, 영토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일 간의 또는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진전시키는 수단으로 납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정엽: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전에 말한 대로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민주주의 정상회의 같은 것을 하게 되고 중국에 대한 체제 이념과 체제 경쟁으로서의 구도를 조금 더 선명하게 하면서 미중 간의 경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주게 될 경우에는 과연 한반도 문제를 다룰 여력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와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사람들은 훨씬 더 큰 경

쟁,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다뤘던 미중의 경쟁구도를 볼 때,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자기들의 이념과 정치체제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방어적인 입장으로 국제 사회에 참여를 하다가 이제는 자기네들의 이념과 체제를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할 정도까지 발전한 상황이니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 되돌리려고 하는 경쟁의 차원이 있죠.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결국 트럼프와 비슷하게 중국을 때리는 일 외에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임기 초반 한 3월 정도까지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도쿄 올림픽의 성격도 상당히 좌우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보면 일본 역시 본인들이 생각해왔던 차원 문제를 벗어난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희식:

결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대중 정책도 사실은 안개 속에 있는 거잖아요? 국내적으로도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바이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back to normal을 이야기해도 국내 정치를 고려한다면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나올 가능성들도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안 잡히면 트럼프의 유산이 미국의 발목을 강하게 잡게 되기 때문에 바이든 조차도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렇게 강하게 나오게 되면 도쿄 올림픽이라는 게 사실상 평화의 제전이라기보다는 미중 경쟁의 대리전이 돼버릴거고 이렇게 되면 북일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연계시켜서 평화 프로세스 진척시키려고 했던 한국의 정책에 큰 브레이크가 걸릴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기태 선생님은 거꾸로 우리가 이걸

Post- Corona

활용해서 최대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척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두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 윤대엽:

한편으로 올림픽, 또는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를 계기로 하는 이벤트 평화, 이벤트 외교는 이제 좀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남북 간에는 뭐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만나면 해결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벤트 외교보다는 다지적이고 제도화된 협상과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최희식: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스가 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떤 강렬한 의지 같은 게 느껴지나요? 이기태 박사님이 한 번 줌…….

// 이기태:

불행히도 안 느껴집니다.

// 최희식:

네

// 이기태:

올해 통일연구원에서 ‘한반도 평화번영과 북일 관계 연구’라는 과제를 하면서 북일 관계를 연구했지만 사실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스가 정부가 과

연 대북정책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선 스가 자신이 외교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그나마 어느 정도의 인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인식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사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정부부터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보국장이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주도해왔는데 최근에 스가 정부 내에서 약간의 변화 움직임이 보입니다. 기타무라 국장은 경찰청 출신인데 이번에 타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국가안보국 차장으로 들어갔고, 앞으로 대북정책에서 기존 경찰청 라인에서 외무성 라인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북일 외교 당국자 간 실무회담과 같은 조금 더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즉 향후 북일교섭은 특사 파견과 같은 지도자 간 '탑다운' 방식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북일 간 비공식 실무 접촉이 계속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조건 없는 만남 제의에도 어떠한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노동신문 등을 통해 대일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북일 관계 진전의 계기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 우정엽: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재가 풀리지 않는 이상 일본이 제공할 수 있는 게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일본과 뭘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일본과 그 정도 대화를 나눌 마음이 북한에게 있다면 미군 유해 송환이나 이산가족, 아니면 문화 교류 정도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김정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북한에 대한 제재

Post-Corona

에 전혀 변화가 없으니 일본은 계속해서 조건 없는 만남을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실제로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면 일본 사람들로서는 뭐 Why not? 이겠죠.

하지만 지금 북한이 그걸 받아들일 여건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블링컨이 2018년에 뉴욕타임즈에 쓴 것을 보면, 이란 협상을 모델로 북한과 협상하라는 말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국내의 한국일보 같은 곳에서는 스포딜을 한다 어쩐다 했는데, 저는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란과의 합의는 스포딜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무기를 만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빅딜을 한 것이거든요. 그걸 북한에 적용시키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링컨이 당시에 그 기사를 썼던 것은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할까봐 그걸 염두에 두고 제안을 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무제한적이고 침투적인 검증이 돼야 한다', '이란은 그걸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걸 북한이 받을 수 있는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북한은 일본과 이야기 해봤자 본인들에게 돌아올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어놓지 않은 이란과 협상을 하고 타협하는데 거의 2년 반이 걸렸거든요. 그러니 이미 핵무기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보다 더 까다로운 협상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이기태 박사님이 내년에 북일간의 문제를 논문으로 쓰실 게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쓰실 게 별로 없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 이기태:

올해 못 썼습니다.

// 윤대엽: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북일 관계를 진전시켰던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 간의 교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 문제, 남북자 문제 뭐 이런 의제들로 인해 북일 간의 교섭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당 교류입니다. 특히 사회당 계열의 정당 교류가 북일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일단 일본에서 사회당과 야당이 축소되었고 현재화 된 위협으로서 북일 의제를 고려할 때 이런 정당 관여를 통해 진전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또 마지막은 한일 관계입니다. 한일 간의 협력이 북일 관계를 진전시키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했는데 현재는 남북관계가 일본을 타자화시키거나, 한일 관계가 남북관계와 반비례하는 모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북한 문제와 한국 문제를 동일시함으로써 정치적 니즈(needs)가 축소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 최희식:

그래도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북미 대화가 만약에 기미가 잘 안 보인다고 했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첫 번째 수단은 중국이겠지만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에게 의존한다는 건 더더욱 힘들거고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일본이라는 카드가 사실상 유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미중 갈등이나 또 북미 간의 교착 상태에서 여러 번 경험해봐서, 이게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면 기본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는 남북 관계와 북일 관계밖에 없는데 남북 관계를 호전시키기에는 약간 좀 계기가 없는 측면들이 있고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삼

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기태 박사님께서도 도쿄 올림픽의 어떤 가능성들을 좀 고려하신 것 같은데요. 미국 사정을 보건데, 당장 내년 상반기에 대북 정책이 명료하게 나올 거라곤 생각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에게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형태의 대북 정책만이라도 나와 준다면, 일본의 대북 정책이야말로 미국의 대북 정책과 호응하고 연동하는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특히 납치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접근하려고 하는 요인이 강해지지 않을까요? 실패할 수는 있겠지만, 도쿄올림픽에 초청장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충분히 또 북일 관계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도쿄 올림픽 개최와 북일 대화의 가능성

// 우정엽:

최 박사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북한이 올림픽에 올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은 가능하죠.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평창에 대해 언급하기 전까지는 미국과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먼저 의사를 보이니까, 그 다음에 북한이 오는 문제 등을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미국과 이야기해서 제재 유예 같은 것들을 풀어나가는 건 있었죠.

만약에 올해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도쿄 올림픽에 가겠다고 할 경우, 북한 선수단이나 북한의 제재 대상인 누군가의 일본 방문 문제 등을 우리나라가 미국을 설득해서 일시적이라도 도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 이상을 하는 것은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몫이죠.

저는 만약에 북한이 올림픽에 나오겠다고 한다면, 바이든 정부가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2019년 스톡홀름선언이 끝나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뭐다 하면서 북한과 미국과의 분위기가 고조된 적이 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이 끝났죠. 아마 북한은 그러한 결과에 대해 앞으로도 고민을 하긴 할 겁니다. 북한이 일본의 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것은 일본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보다는 100% 미국과 어떤 식으로든 다시 인게이지(engage)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김정은이 트럼프와 만났을 때 제재 등의 문제가 단번에 성사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죠. 지금 바이든이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싱가포르 때처럼 2페이지짜리 선언문을 내는 그런 식의 협상이 아니라, 아마 이란 때보다도 더 긴 159페이지를 넘어서는 그런 협상을 할 것으로 봐요. 과연 북한이 그런 협상을 염두에 두고 나올 것인가 이게 김정은의 고민이겠죠.

// 윤대엽: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핵을 가지기 이전의 북한 문제는 의지라든가 시간이라든가 협상 방법에 유연성이 있었겠지만, 핵무장한 북한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결단에 따라서 협상이 진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도 100% 동의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단계적인 핵 포기과 동시적인 체제 안전 보장을 교환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북한이 핵 포기를 결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체제 안전을 보장해줄 것인가라는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외교, 정치, 군사 등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데 일본의 전략적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일갈등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일본의

Post- Corona

역할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체제가 동북아의 긍정적인 질서에 기여해야 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일본의 역할을 확장해주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는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의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이기태:

저는 역시 한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한일 관계의 현안 문제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인식의 간극 차이가 깊습니다. 아까 지역질서에서 현상 유지, 현상 변경이라는 표현들이 나왔었는데 한국은 일본을 현상변경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지역의 현상변경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일본은 기존에 중국, 북한을 현상변경세력으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한국을 미국 중심의 전후 질서에 대한 하나의 현상변경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강제동원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윤대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북일 국교정상화는 결국 한일 국교정상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본 입장입니다. 한국이나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합의내용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2002년 북일 평양공동선언에서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취지를 북한이 인정했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만, 제가 일본에서 조총련 관계자와 만나보면 당시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한일 간에 '65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체제를 형성하려고 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북일 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일 간에 이 문제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북일 간에도 똑같은 갈등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런 측면에서 북일 관계와 한일 관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일본과 잘 해결해 나가야지 나중에 북일 관계, 혹은 남북일 관계까지 잘 해결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우정엽:

저는 일본과 한국 문제도 우리 중심으로 보는 것보다 다양한 시각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안 되면 한일 간의 문제에 개입할 생각이 없었죠. 그러다보니 대중 전략을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도 추진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기본적으로 이념과 체제 경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 동원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와 같은 변수가 앞으로는 크게 고려되는 게 아니라 동원 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중심의 문제를 미국, 중국, 아니면 일본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봐요. 그렇게 따져보면,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불리한 환경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희식:

네, 아주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염두에 두면서 사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아주 유익한 토론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日本空間)**